

뿌진, 김정은에게 축전

우호 동맹 관계
강화할 것

조선중앙통신의 1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18일 로씨야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축전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축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앞에서도 친선이며 동맹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서 협동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로씨야와 조선 사이의 불평등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 신화넷

조선, 미국 핵무력 시위에 대응 조치 고려

조선중앙통신의 1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 국방성 대변인은 24일 담화를 발표, 미국이 최근 조선의 안보 환경에 엄중한 핵 불안정 요소를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조선은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3일 미국 해군 공격형 핵잠수함이 승무원들의 휴식과 군수품 보충의 구실로 한국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지난 11월 7일에도 미국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 신화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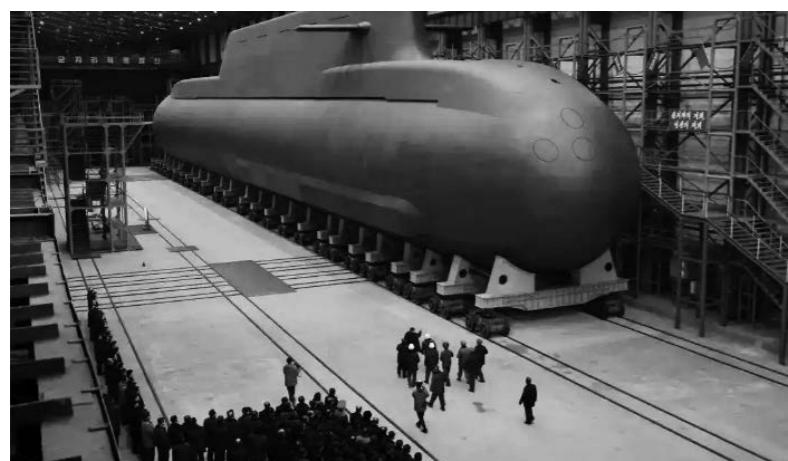
김정은,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조선중앙통신의 1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 미사일총국은 24일 조선 동해상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 신화넷

김정은, 핵동력 잠수함 건조 지도



조선중앙통신의 1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8,700 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핵동력 공격형 잠수함 건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군 핵무장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할 확고한 의지

/ 신화넷

朝夕奔梦

友誠敬愛法公平自和文富
善信業國治正等由諧明主強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일본 침략 죄행은 론박할 수 없다

—일본 역사학자, 쏘련의 일본 731 부대 심문 기밀 해제 문서 론하다



2025년 9월 18일, 사람들이 중국 침략 일본군 731 부대 죄증 진술관을 참관하고 있다.

/ 신화넷

최근 중앙서류관은 로씨야족이 이 관한 쏘련의 일본 731 부대 심문 기밀 해제 문서 자료 일부를 공개하여 일본침략군이 세균전을 실시한 것은 조직적이고 사전에 모의한, 우로부터 아래까지 체계를 이룬 국가범죄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일본 아이치(愛知) 학원대학 문학부 역사학과 부교수 히로나카 이세이는 앞서 신화통신 기자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일본의 침략 죄행은 론박할 수 없다며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731 부대의 죄행을 진일보 폭로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731 부대 구성원에 대한 심문 기록, 731 부대 죄

행 조사보고서, 쏘련 관내 서한 등이 포함되며 시간 범위는 1939년 5월 11일부터 1950년 12월 25일까지이다.

히로나카 이세이는 1939년 일본과 쏘련간 노몬한(諾門罕) 전쟁이 발발하고 이 전쟁에서 731 부대가 세균무기를 강에 투하했다고 지적했다. 쏘련은 일찍부터 731 부대의 조직 성격과 활동에 주목하고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쏘련이 이렇게 이른 시기에 이미 731 부대에 주목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은 과거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나는 이번 문서 자료 공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이번 문서 자료는 하바롭스크(伯力) 재판 문서를 주제로 재판전, 재

판종, 재판후 세 역사적 단계가 포함되었다. 문서 자료는 하바롭스크에서의 쏘련의 재판 전기(前期) 수사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731 부대 죄행과 관련된 인원이 200 여명에 달하고 핵심 전쟁범 및 증인에 대한 집중적인 증거 확보를 거쳐 최종적으로 12 명의 전쟁범을 확정하여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히로나카는 현재 731 부대 관련 자료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문서를 공개한 것은 관련 연구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면서 이는 731 부대의 진실한 면모를 복원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로나카는 731 부대가 표면적으로

는 '방역급수부대'(防疫給水部队)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세균무기 연구개발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론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731 부대가 비록 일본 관동군의 한 부대였지만 그들이 실행한 세균전은 육군 참모본부, 육군성 등 기관이 참여한 조직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세균전 실행 과정에 731 부대는 육군 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고 육군성과 관동군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731 부대 세균전은 또 일본 육군 군의학교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작전, 지금 등 면에서 볼 때 731 부대가 실행한 세균전은 체계적이었다."

1945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관동군은 여러 전용렬차를 특별히 비준하고 연선에 우선 통행을 지시했다. 731 부대 구성원들은 전용렬차를 타고 할빈을 출발해 통화, 안동(현 료녕성 단동시), 부산을 거쳐 나중에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주했다. 전쟁 후 일본군은 원본 문서를 소각하여 죄행과 역사적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히로나카는 대량의 침략전쟁 관련 문서가 일본 패전 전후 체계적으로 소각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은 731 부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심지어 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에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히로나카는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남경대학살, 731 부대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일본의 침략 역사와 가해 사실, 그리고 중국인민에게 가한 고통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다음 세대가 차분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이 역사를 직시하기 바란다."

/ 신화넷

일본 강제징용 한국 군인 유족, 야스쿠니신사에 소송 제기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군에 강제징용된 일부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야스쿠니신사가 동의없이 합사(合祀)한 조상 위패 철거 및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에 88 억원(한화, 인민페로 약 420 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10 명의 한국 군인 및 군속 유족이 원고로 나서 야스쿠니신사가 사망자 이름과 사망 날짜가 기재된 '제신(祭神)' 명부와 '제신명표(名票)'에서 그들 조상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본군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이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문제를 두고 한국 법원에



자료사진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제기한 첫 소송이다.

소송 대리인단은 야스쿠니신사 합사는 유족들에게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닌, 희생자를 침략전쟁 미화 서사 틀에 편입시키는 가해 행위로 자기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유족들의 권리

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일본정부가 한국인을 강제징용해 전쟁에 참가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야스쿠니신사에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해 유족의 인격권, 종교신앙 및 량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4명의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군국주의가 대외침략 전쟁을 일으킨 정신적 도구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된 2만여명의 한국인 역시 이 신사에 합사되었다. 관련 상황이 1990년대에 폭로된 후 희생자 유족들은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두차례 제기했으나 모두 '소송 시효 초과' 리유로 기각되었다. 올해 9월 6명 유족이 다시 일본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신화넷

